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73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0년 3월 19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자금 5,000억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고금리 채무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6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행코자 함.
- 나. 이에 따라 원활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0명 채용 관련 비용,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재원 등을 2020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증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50명 추가 채용(3월말 배치 예정)과 관련된 인건비 등 출연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는데 필요한 보증재원 출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 인건비와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코로나19 확산과 재단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경제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위축, 수출감소, 경제 활동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 경제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치고 있음.
-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0.2.20.)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의 97.6%에서 매출이 감소(매우감소 77.3%, 감소 20.3%)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 에서도 조사대상 1,100개 업체 중 64.8%(713개 업체)가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해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소재 기업 매출액 감소 상황>

사례수	대폭 감소	약간 감소	장기화 시 영향있음	영향 없음	종합	
					피해 있음	피해 없음
1,100업체	64.8% (713업체)	14.2% (156업체)	17.0% (187업체)	4.0% (44업체)	79.0% (869업체)	21.0% (231업체)

※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 서울시(2020.3.20.)

-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업체들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감소비율은 평균 56.4%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순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 소재 기업 피해 정도>

(단위 : 업체수, %)

구분	자영업 (1인)	소상공인 (2~9인)	중소기업 (10인 이상)	서울 소재 전체 기업
피해업체	73	514	282	869
매출감소(%)	69.6%	59.2%	47.8%	56.4%

※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 서울시(2020.3.20.)

-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과 같이 실효성 있고 수요가 높은 정책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출연 동의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과 급증하고 있는 보증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 신용보증 지원인력 충원**

- 서울시는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50명, 4개월)을 채용하고자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여 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 증액을 요청했음.

### <기간제 인력 채용 경비 내역>

▶ 인건비 463,672천원(기본연봉+제수당)	
- 기본연봉(기본급 + 직무급)	: 328,372천원
- 제수당(시간외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금+가족수당)	: 135,300천원
▶ 경비 201,222천원(복리비+출장여비+사무집기 렌탈료+소모품비 등)	

- 재단은 올해 3월 초, 코로나19로 급증한 보증 상담과 서류작성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50명(60세~65세)을 별도로 채용해 지점별로 배치한 바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보증업무가 폭증하여 보증상담과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원 확충의 필요성이 발생했음.
  - 3월 20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 상담건수는 23,590건으로 전년 동월(2019.3.1~3.31.) 대비 13,267건(228.5%) 증가했으며, 접수건수도 18,116건으로 10,777건(246.8%) 증가했음.
  - 특별보증 상담 평균대기일도 초기에는 6일이었으나 현재 15일로 증가했고 최대 24일이 소요되는 지점도 있음.
- 이에 따라 기간제 인력 50명(보증상담 20명, 보증심사 30명)을 4개월 동안 채용하여 추가업무에 대응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3개월분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1개월분은 재단의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보증 업무도 계속 증가할 수 있어, 지원인력의 채용기간 연장과 추가적인 인원확충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라. 대환대출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증액

- 서울시는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에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보증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30억원의 출연금을 증액할 계획임.
- 당초 특별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와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50억원의 출연이 요청<sup>1)</sup>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출연규모를 30억원으로 조정하고, 20억원은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조정했음.
- 이번 출연금 확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전망 악화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가 출연 규모가 131억 6천만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피해규모가 더 큰<sup>2)</sup>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출연 규모로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저금리 전환에 대한 대출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단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1)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긴급성과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운용배수를 12배로 상정하고 600억원 보증지원에 대한 기본재산 50억원의 추가출연이 요청된 것임.

2)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초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더 많다는 응답이 81.2%로 조사됨.

- 2015년 메르스 당시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9.4%였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했던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과 ‘서울경제 붐업(Boom-Up) 특별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쳤음.
- 한편, 정부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2020.3.19.)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정책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2020.3.19.) 결정 내용>

-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
- ▶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시행
- ▶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 유예
- ▶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마. 종합의견**

- WHO의 팬데믹 선언과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고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1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에 추가적인 출연을 통해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비해 적은 출연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증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정부가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을 시행할 것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2180-8058